「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2017 여름): 305-32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1 No.2 (2017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1.2.13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최 정 인*
문 명 재**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로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대학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절대적 자원의 양과 정부재정의존도는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포함한 154개교의 데이터를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 수집하였고, 연구방법으로 순위형 로짓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예산규모를 지닌 대학조직일수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에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국내대학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원의존이론, 조직이론, 지방대학, 대학예산

Ⅰ. 서론

2014년 1월 교육부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등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목표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4a). 학령인구 급감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저하 및 경영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에 따르면 '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는 지방대이고, 그 중 지방 전문대학은 51.5%를 차지한다(교육부, 2015). 지방대학의 미충원 현상은 해당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교육부, 2015).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교육부, 2014a).

국내 지방대학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주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속이 높은 공조직의 특성으로 인해(박상희 & 김병섭,

* 제1저자
** 교신저자

2012), 대학조직과 정부에는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학조직에 강한 권력(power)을 지니게 된다. 또한, 국내대학은 반값 등록금으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이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자원의 양은 제도적 압력에 따른 대응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원의 양이 적은 대학일수록 제도적 압력에 더욱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대학조직의 정부에 대한 자원의존도는 제도적 압력에 따른 대응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로부터 자원을 이미 확보한 대학조직일수록 향후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제도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셋째,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의 관계는 대학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은 정부재정의존도가 교육부의 제도적 압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둘째, 자원의존이론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제도적 압력 하에서 대학조직이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 순위형 로짓 회귀 분석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논문이 지니는 함의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Ⅱ.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개요

1.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교육부(2015)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교육부는 기존 학생정원과 관련된 적실성 있는 방안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보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부, 2015). 둘째,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한다(교육부, 2015). 기존의 정책이 하위 15%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본 정책은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교육부, 2015). 다만, 평가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재도약의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지원을 공표하였다(교육부, 2015). 셋째,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기존에는 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 등의 양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정책은 질적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 하는 취지를 지닌다(교육부, 2015). 종합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2.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 내용 및 방법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일반대학은 단계평가를 따르게 되며,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교육부, 2014b). 일반대학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를 통해 그룹1과 그룹2로 나뉘게 된다. 그룹1대학은 평가지표의 결과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그룹2에 속하는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D, E 등급을 부여받는다(교육부, 2014b). 단, 2단계 평가결과 그룹2대학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대학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그룹1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교육부, 2014b).

대학구조개혁 평가 1주기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교육부, 2015). 평가대상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대상으로 총 298교가 선정되었다(교육부, 2015). 2015년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학교 수는 〈표 1〉과 같다. 일반대학의 경우 그룹1단계 평가 점수 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126개교가 선정되었다(교육부, 2015). 일반대학의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이 D 등급, 70점 미만은 E 등급으로 분류되며, 총 3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표 1〉 20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학교 수)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별도 조치a	평가제외
학교 수	일반	34교	56교	36교	26교	6교	5교	29교
	전문	14교	26교	58교	27교	7교	3교	2교

자료: 교육부(2015)「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a)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 평균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

3.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지표

대학은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교육부, 2014b). 평가지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상이하다(교육부, 2014b). 일반대학의 경우, 1단계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는 〈표 2〉와 같다. 1단계 평가결과, 그룹2(D, E등급)의 대상이 된 대학은 〈표 3〉의 2단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교육부, 2014b). 최근 3년간 고등교육법에 따라 행정 또는 재정 제재와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급의 하향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교육부, 2014b).

본 연구는 평가지표의 항목 중 특성화를 중점 지표로 분석하였다. 대학의 특성화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중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현경, 2017; 하지수, 2017a; 하지수 2017b).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란, 대학 스스로의 강점으로 교육, 연구, 사회공

헌, 산학협력, 국제화, 평생 교육 등 특정한 기능을 특화하기 위해 기울인 전략적 노력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본 항목의 평가 방향은 대학이 스스로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그에 따른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교육부, 2014b). 평가요소로 특성화계획 수립, 계획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A부터 E까지 5개의 등급이 부여된다(교육부, 2014b).

〈표 2〉 일반대학의 1단계 평가지표

항목(60)	평가 지표
교육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교육성과 (15)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자료: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표 3〉 일반대학의 2단계 평가지표

항목(40)	평가 지표
중장기발전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자료: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4. 평가 결과의 활용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평가결과가 직접적으로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첫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5년 당시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인 이유로 평가 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 받게 되었다(교육부, 2015).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A등

급에 해당되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아래 〈표 4〉와 같이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 받았다(교육부, 2015).

〈표 4〉 정원감축 비율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평가제외
감축 비율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전문		3%	5%	7%	10%	5%

자료: 교육부(2015)「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둘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과 연계된다.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된다(교육부, 2014b). 실제로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D와 E등급의 대학은 〈표 6〉과 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교육부, 2015). 특히,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되었다(교육부, 2015). 즉,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주요자원인 재정과 인적자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체감되고 있다.

〈표 6〉 '16년 그룹2 재정지원 제한 범위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a		학자금b	
			Ⅰ유형	Ⅱ유형	일반	든든
D 등급	80점 이상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	-
	80점 미만	기존 사업 지원 지속 신규 사업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E 등급		전면 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자료: 교육부(2015)「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a) 소득연계 차등지원
b)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연계지원

Ⅲ.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1.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자원(resource)은, 조직의 경쟁우위 향상에 필수적인 모든 자산, 능력, 조직적 과정, 정보, 지식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Barney, 1991).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은 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자원을 다른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Pfeffer & Leong 1977; Pfeffer & Salancik, 1978). 즉, 조직은 생존과 존속을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

터 자원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자원을 성공적으로 획득 했을 때 권력, 영향력, 그리고 장기간의 안정성을 지니게 된다(Malatesta & Smith, 2014). 이처럼 자원의존이론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협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존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간 권력의존의 결과(power-dependence outcomes)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권력에 따른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Ouchi, 1980; Williamson, 1985; 박상희 & 김병섭, 2012 재인용). 또한, 자원의존이론에서 조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조직이 직면하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주체이므로,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박상희 & 김병섭, 20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원의존이론은 공공부문의 조직이 다양한 제도와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어떻게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하는지 설명하며, 조직이 외부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 검증하는 유용한 이론적 분석틀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통해 국내조직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제도적 압력에 어떠한 대응전략을 펼치는지 검증한다.

2. 자원의존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원의존이론과 관련된 기존의 실증연구는 의존성 완화의 적극적 전략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Hillman과 동료들(2009)은 Pfeffer와 Salancik(1978)이 언급한 기업의 환경 의존성 완화를 위해 조직이 취하는 적극적 전략을 다룬 연구들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업합병(merger)과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에 관한 연구이다(Hillman et al., 2009). 조직의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중요한 경쟁자를 흡수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자원의 유입 또는 결과물을 구매함으로써 상호의존성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3가지 유형의 세부연구가 이루어졌다(Hillman et al., 2009). 둘째, 합작투자(joint ventures)와 구분되는 조직간 관계(other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이다(Hillman et al., 2009). 셋째, 이사회의 구성(boards of directions)이다(Hillman et al., 2009).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외국인 이사 선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곽주영 외(2011)의 연구와 공공기관 임원인사를 다룬 박상희와 김병섭(2012)의 연구가 있다. 넷째, 환경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on)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다(e.g. Mullery, et al., 1995; Blumentritt & Nigh, 2002, Lester et al., 2008; Hillman et al., 2009 재인용). 다섯째, 경영자교체(executive succession)의 전략을 취하는 연구이다(e.g. Harrison, et al., 1988; Hillman et al., 2009 재인용). 한편, Malatesta & Smith(2014)의 연구는 자원의존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검토하며, 공공부문의 현장에서 관리자가 얻을 수 있는 실천적 함의(lessons)를 제시했다. 저자들은 핵심자원을 환경으로부터 얻기 위해 조직이 취하는 3가지 세부전략으로, 합병(merging), 파트너와 동맹 맺기(forming alliances with partners), 흡수(co-opting)를 제시한다(Malatesta & Smith, 2014).

국내에서 자원의존이론을 적용한 실증연구는 주로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정욱과 김보경(2015)의 연구는 사회적 혁신가 정신이 자원의존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수도권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자원의존패턴을 제시하며 비영리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그리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원의존정도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저자들은 비영리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자원의 안정적 획득과 다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혁신가 정신(위험 감수, 혁신성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자원의존정도를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자립도를 통해 자원의존패턴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정규진과 동료들(2013)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회적 기업들과 관련된 내부역량 그리고 환경적,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 같은 요인들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정부의존도라는 잠재적 요인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결과, 제도적 요인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환경 요인은 정부의존도와 지속가능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제도적 요인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원의존이론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실제로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따라 공조직이 취하는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특히,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핵심인 자원의 절대적 양에 대한 분석과 정부와의 특수한 비대칭적 관계에 따라 조직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예산과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자원의존이론의 핵심논리를 검증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3.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1) 자원의 절대적 양이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래 〈그림 1〉과 같이,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절대적 양은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1). 대응전략의 형태는 그 정도에 따라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무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Oliver(1991) 연구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다섯 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1].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대학조직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시점(time1)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적 양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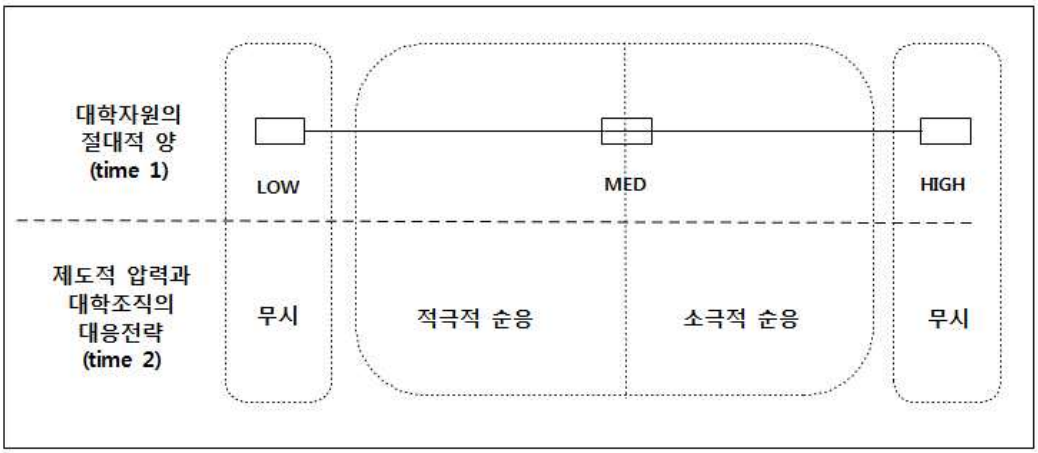
1) Oliver(1991: 152)는 제도적 과정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으로 묵인(acquiesce), 타협(compromise), 회피(avoid), 반항(defy), 조종(manipulate)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time2)에 세 가지 형태의 대응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원의 규모와 대응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 이전시점(time1)에서 자원의 양이 극히 적은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평가시점(time2)에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H1-1).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은 향후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부의 제도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H1-2). 반면, 자원의 양이 많은 조직은 정부와의 권력관계에서 자원이 적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므로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H1-3). 그러나 자원의 양이 방대한 럭셔리한 대학조직(luxurious organizations)은 교육부와의 권력관계에 보다 자유로울 것이다. 즉, 교육부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유인이 적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에 순응하지 않은 무시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H1-4).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대 가설(H1)과 세부가설을 도출하였다.

H1: 대학조직의 자원의 양은 제도적 압력에 따른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원의 양이 극히 적은 조직은 대학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지 않은 무시전략을 취할 것이다.
H1-2: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은 제도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H1-3: 자원의 양이 많은 조직은 제도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H1-4: 자원의 양이 방대한 조직(luxurious organizations)은 대학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지 않은 무시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림 1〉 대학의 절대적인 자원의 양과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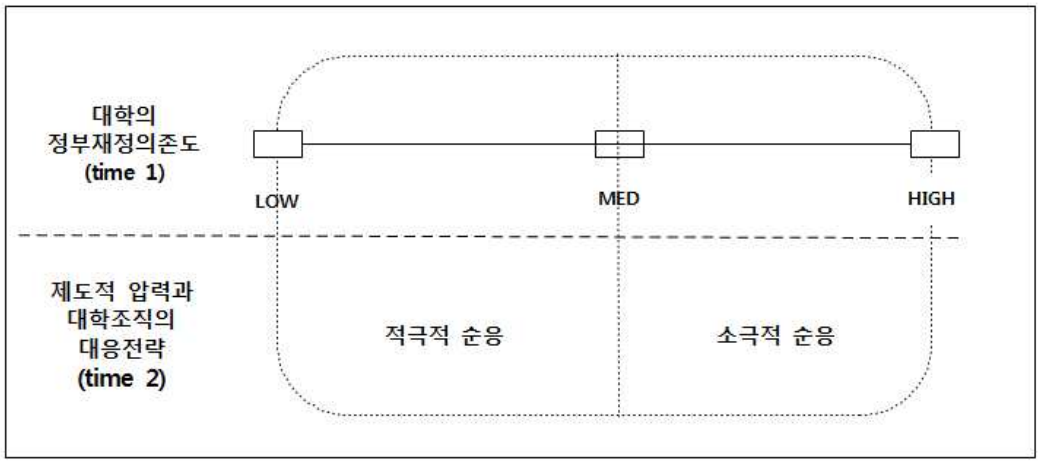
2)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래 〈그림 2〉와 같이, 정부에 대한 조직의 재정의존도는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평가이전 시점에서(time1) 정부재정의존도가 높다면, 정부로부터 이미 자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향후(time2) 교육부의 평가기준을 유지하는 소극적 순응의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평가이전 시점(time 1)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은 미래에(time 2)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적극적 순응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에 대한 대 가설(H2)과 세부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2: 대학의 정부재정의존도는 제도적 압력에 따른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정부재정의존도가 낮은 대학은 제도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H2-2: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제도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림 2〉 대학의 재정의존도와 대응전략



3)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에 있어 자원이 미치는 영향

대학자원과 정부재정의존도의 관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는 정부재정의존도가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의 절대적 양이 적은 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H3). 대학자원의 절대적 양은 x축으로, 정부재정의존도는 y축으로 설정하였다. 자원의 양은 중간수준(med)을 중심으로 규모가 작은 조직과 큰 조직으로 구분하였고, 대학의 정부재정의존도 역시 재정의존도가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각 4사분면에는 대학이 택하게 되는 대응전략의 유형을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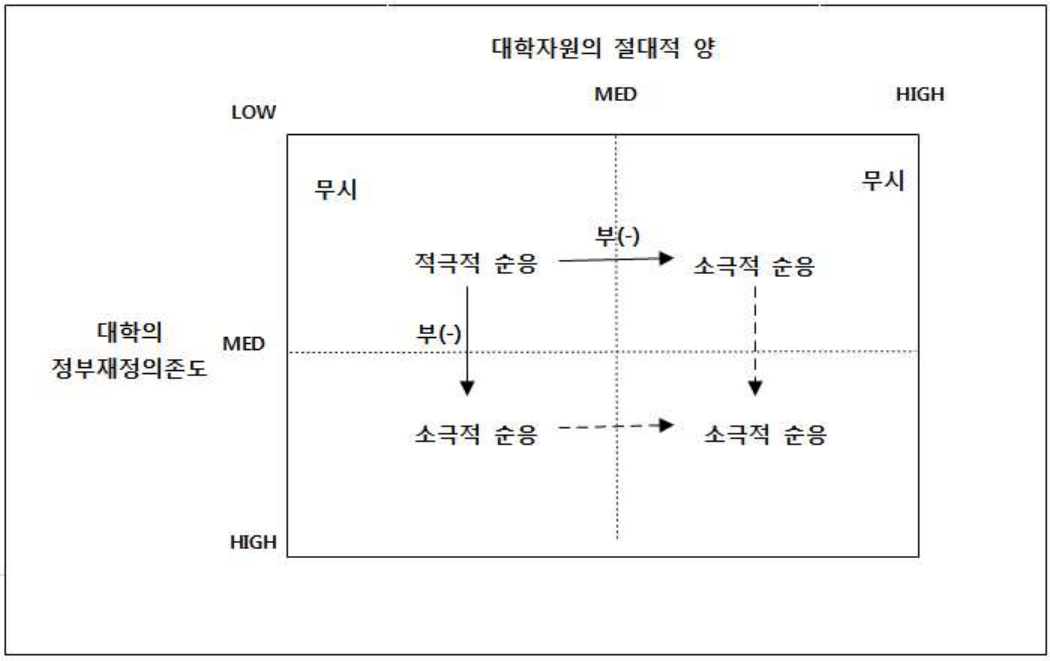
대학의 정부재정의존도와 대응전략의 관계를 대학자원의 절대적 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자원이 적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살펴보면, 대학의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학조직은 적극적 순응에서 소극적 순응의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자원의 규모가 작은 대학은 평가이전 시점에 정부로부터 받은 자원이 적을수록 경우에 더욱 민감하게 향후 교육부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할 것이다. 대학자원의 양이 적지만,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한 조직은 향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제도적 압력에 대응은 하나 소극적인 형태로 순응할 것이다. 즉,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 내에서는 정부재정의존도는 대학의 대응전략과 부(-)의 관계를 지닌다(1사분면→4사분면). 이는 예산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대학에서 향후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수혜여부는 대학의 존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자원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조직은 2사분면과 3사분면에 포함된다. 자원의 양이 큰 대학은 이미 자원을 상당부분 보유한 상황이므로 평가이전의 정부재정의존도가 미래의 대응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즉, 대학자원의 규모가 큰 조직은 대학의 재정의존도와 상관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2사분면→3사분면). 이를 정리하여, 대학자원의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H3).

H3: 대학조직의 자원의 양은 정부재정의존도가 대응전략에 미치는 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즉, 예산규모가 적은 조직은 예산규모가 큰 조직에 비해 정부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대학의 제도적 압력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것이다.

〈그림 3〉 대학자원과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



Ⅳ.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공시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리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매해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 선발, 학생현황, 전임교원 현황, 특성화정보 등의 세부항목에 대한 대학별 자료를 공시한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인 특성화학과 개설현황, 대학의 예산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혜규모, 대학의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학생 중도 탈락율, 대학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여 대학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4년제 일반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2] 분석 자료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인 2014년도와 평가 1주기가 이루어진 2015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 대학의 대응전략은 서열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순위형 로짓 회귀 분석(Ord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조직의 대응전략으로 적극적 순응, 소극적 순응, 무시의 3가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대학조직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순응은 특성화학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14년도에 특성화학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구조개혁 발표 후 2015년에 새롭게 특성화학과를 신설한 경우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학과가 대폭 늘어난 경우(3개 이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소극적 순응은 2015년 평가시점에 특성화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조직을 말한다. 이는 대학조직 중에 2014년도 대비 2015년에 특성화학과가 소폭 늘어난 경우(3개미만), 그리고 2014년 대비 특성화학과 수가 감소하였더라도 적어도 1개 이상의 특성화학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무시전략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응하지 않은 전략을 택한 조직을 말한다. 즉, 2015년에 특성화학과가 존재하지 않은 대학을 포함한다. 이는 2014년과 2015년 모두 특성화학과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과 2014년에는 특성화학과가 존재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된 대학을 무시전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독립변수인 조직의 절대적 자원의 양(absolute amount)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의 구조개혁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인 2014년도의 학생당 예산규모(로그)로 측정되었다. 대학의 학생규모에 따라 각 조직이 필요한 예산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정욱 과 김보경(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부재정의존도[3]를 측정하였다. 이는 2014년도 대학 총예산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혜 받은 재정 지원 사업 규모의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2)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자원의존성(resource dependency)=(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전체 재원).

통제변수로는 대학의 자원 외에 특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조직의 역량을 고려하였다. 대학조직의 역량은 대학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저널 논문 게재 건수, 학생 중도탈락률로 측정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소재지역이 수도권인가 비수도권인가의 여부도 특성화 전략을 취하는데 중요변수이므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방법은 아래 〈표 7〉에 정리하였다.

〈표 7〉 변수의 측정지표

변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대학조직 대응전략	적극적 순응	**특성화학과를 적극적으로 개설한 경우** (coding 3) ① 2014년도에 특성화학과가 0개였으나, 2015년에 새롭게 신설된 경우 ②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3개 이상 특성화학과가 개설된 경우
		소극적 순응	**특성화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coding 2) ①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특성화학과가 3개미만 개설된 경우 ②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특성화학과가 감소하였더라도 적어도 1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무시	**특성화학과가 없는 경우** (coding 1) ① 2014년도에 특성화학과가 0개이고, 2015년도에도 0개인 경우 ② 2014년도에 특성화학과가 1개 이상 개설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특성화학과가 0개인 경우
독립변수	대학조직 자원의 양	학생 1인당 예산 규모 (로그)	학생 1인당 예산 규모=log(2014년도 각 대학의 총예산/2014년도 각 대학의 정원 내·외 재적학생)
	자원 의존도	정부재정 의존도 (로그)	정부재정의존도=log(2014년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금액/2014년도 대학의 총 예산)
통제변수	대학조직역량	신입생 충원율(%)	2014년도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입학자/정원 내 모집인원)*100
		재학생 충원율(%)	2014년도 재학생 충원율=《(정원 내 재학생/(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100
		연구실적	2014년도 한해 전임교원 1인당 저명한 국제저널(SCI급/ SCOPUS) 논문 게재 건수
		학생 중도탈락률(%)	2014년도 중도탈락 학생비율=(중도탈락학생/재적학생)*100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대학=1, 비수도권대학(지방대학)=0

3.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8〉과 같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9〉로 정리되었다. 먼저, 〈표 9〉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대학조직의 대응전략은 소극적 순응이 40.90%로 가장 많으며, 적극적 순응은 35.06% , 무시전략은 24.02%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 2014년 당해 예산규모는 로그 평균값이 9.44이다. 정부의 재정의존도는 로그 평균값은 약 1.58로 정부 재정의존율로 환산하였을 때 약 8.61%이다. 재정의존율은 0%에서 최대 52%의 범위 안에 분포한다. 지방대학은

전체의 약 58%(90개교)이고, 수도권 대학은 약 42%(64개교)의 비율을 차지한다.

〈표 8〉 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s		Obs	Mean	Std. Dev.	Min	Max
종속변수	대학조직 대응전략	154	2.12	0.76	1	3
독립변수	1인당학생 예산규모(로그)	154	9.44	0.61	8.65	11.99
	정부재정의존도(로그)	142	1.58	1.40	−2.32	3.95
통제변수	신입생 충원율(%)	154	93.55	16.94	4	101
	재학생 충원율(%)	154	92.64	30.01	0	241.5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154	0.16	0.21	0	1.39
	중도탈락률(%)	154	5.82	6.93	0	79.20
	지역(수도권=1)	154	0.42	0.49	0	1

〈표 9〉 종속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대학조직의 대응전략	Freq.	Percent(%)
무시(1)	37	24.02
소극적 순응(2)	63	40.90
적극적 순응(3)	54	35.06
Total	154	100.00

V. 분석결과

1. 순위형 로짓 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을 위해 〈표 10〉에 순위형 로짓 회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델1은 핵심 독립변수로만을 포함하였고, 모델2는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조직의 역량과 지역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학조직의 절대적인 자원의 양과 교육부에 대한 재정의존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1인당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일수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이 자원의 양이 적으면 핵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인 교육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즉, 평가 이전시점에서 예산규모가 적을수록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부의 제도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요구하는 평가지표에 맞추어 특성화학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정부재정의존도 또한 제도적 압력에 따른 대학조직의 대응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적게 받은 대학일수록 향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더욱 순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모델 3과 모델 4는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의 관계에 있어 예산규모가 지니는 조절효과의 결과를 나타낸다. 자원이 적은 대학조직과 자원이 큰 대학조직을 예산규모의 로그 평균값(9.44)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부재정의존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3의 분석결과, 적은 예산을 지닌 조직의 경우에는 정부재정의존도가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의 방향으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의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에서는 평가이전 시점에서 재정지원사업의 수혜규모가 적을수록 평가시점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따르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순서형 로짓 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대학의 대응전략(특성화 학과 개설현황)			
		독립변수의 영향력 검증 (H1 & H2)		예산규모에 따른 대학의 정부재정의도와 대응전략(H3)	
		Model 1 (독립변수)	Model 2 (독립+통제변수)	Model 3 (예산 적은 조직)	Model 4 (예산 큰 조직)
		Coeff.(Std. Err.)	Coeff.(Std. Err.)	Coeff.(Std. Err.)	Coeff.(Std. Err.)
독립변수	예산규모 (로그)	−0.645**(0.302)	−1.048***(0.375)	−0.454(1.270)	−1.464**(0.654)
	정부재정 의존도(로그)	−0.021(0.114)	−0.250*(0.149)	−0.380*(0.219)	−0.107(0.236)
통제변수	신입생 충원율(%)	−	0.015(0.014)	0.041*(0.023)	−0.001(0.020)
	재학생 충원율(%)	−	0.001(0.006)	−0.003(0.010)	0.005(0.008)
	전임교원 연구실적	−	2.310**(1.106)	0.213(1.967)	3.226**(1.510)
	중도탈락율 (%)	−	−0.009(0.021)	−0.017(0.023)	−0.010(0.076)
	지역 (수도권=1)	−	−0.1666(0.356)	−0.110(0.474)	−0.624(0.631)
/cut1		−7.535(2.885)	−9.896(3.883)	−2.888(11.358)	−15.160(7.156)
/cut2		−5.561(2.849)	−7.841(3.847)	−0.964(11.355)	−12.655(7.072)
Log likelihood		−146.910	−143.322	−91.175	−48.027
N		142	142	91	51
LR chi-square		4.65	11.83	6.13	10.52
Pseudo R^2		0.016	0.040	0.033	0.099

*p〈0.10, **p〈0.05, ***p〈0.01

2. 확률효과(predicted probability) 분석결과

가설1과 가설2의 세부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확률효과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학조직의 자원은 학생당 예산규모로 측정되었으며, 2014년도 기준 최저예산을 지닌 대학조직

(min)과 최고예산(max)을 중심으로 4개의 범위로 구분하였다. 예산규모(1)에 해당하는 그룹은 학생당 예산규모가 가장 적은 그룹에 속하는 대학이며, 예산규모(2)와 예산규모(3)은 중간 수준, 그리고 예산규모(4)는 학생당 예산규모가 가장 큰 대학조직을 포함한 그룹이다.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규모가 적을수록 적극적 순응전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무시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대응전략의 부(-)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로짓 회귀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H1 채택). 세부가설에서 예산규모에 따라 가정하고 있는 내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이 극히 적은 대학조직(예산규모 1)의 경우에는 특성화하는 노력을 포기하기 보다는 적극적 순응(3)의 전략을 택할 확률이 5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1-1기각). 둘째,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조직(예산규모 2)은 소극적 순응의 전략을 택할 확률이 44.5%로 가장 높았고, 적극적 순응(3)을 택할 확률은 34.4%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규모가 적은 대학조직이 적극적 순응(3)을 택할 것이라는 H1-2를 기각하는 결과이나, 적극 순응과 소극 순응전략을 택할 확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규모가 큰 대학조직(예산규모 3)은 H1-3에서 가정하고 있듯이 소극적 순응(2)을 택할 확률이 4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시전략을 택할 확률도 39.8%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산규모가 클 때 대학조직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변화에 순응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규모가 매우 방대한 대학조직(luxurious organizations)의 경우에는 H1-4의 가정대로 교육부의 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전략을 택할 확률이 61.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세부가설은 일부 기각되었지만, 자원의존의 관점에서 자원의 절대적 양이 조직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예산규모에 따른 대학의 대응전략

	대학의 대응전략			세부가설 채택여부
	적극적 순응(3)	소극적 순응(2)	무시(1)	
	Margin	Margin	Margin	
예산규모 (1) Low	0.563***	0.341***	0.096***	H1-1 기각
예산규모 (2)	0.344***	0.445***	0.211***	H1-2 기각
예산규모 (3)	0.175***	0.426***	0.398***	H1-3 채택
예산규모 (4) High	0.079	0.302***	0.619***	H1-4 채택

*p〈0.10, **p〈0.05, ***p〈0.01

다음으로,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가이전에 대학조직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원이 많이 확보된 상태일수록 향후 그들의 요구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H2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로짓 회귀 분석결과와도 동일하며,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은 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가설 2-1과 2-2는 모두 기각되었다. 먼저, 세부가설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재정의존도(1),(2)에 속하는 대학조직은 정부재정존도가 낮은 조직이며, 정부재정의존도(3),(4)는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은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석결과, 정부재정의존도와 상관없이 모든 그룹은 적극 또는 소극적 순응보다는 무시전략을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시전략을 택하는 확률은 정부재정의존도가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의 수혜 금액이 높아질수록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따르지 않고 무시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재정의존도가 낮은 조직의 경우에 소극적 순응을 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의 수혜규모가 적을수록 소극적으로 나마 순응하는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정부와의 자원의존의 관계가 곧 대학이 취하는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2〉 정부재정의존도에 따른 대학의 대응전략

	대학의 대응전략			세부가설 채택여부
	적극적 순응(3)	소극적 순응(2)	무시(1)	
	Margin	Margin	Margin	
정부재정의존도 (1) Low	0.102	0.343**	0.555**	H2-1 기각
정부재정의존도 (2)	0.083	0.311*	0.606**	
정부재정의존도 (3)	0.068	0.277	0.655**	H2-2 기각
정부재정의존도 (4) High	0.055	0.244	0.701**	

*p〈0.10, **p〈0.05, ***p〈0.01

Ⅵ. 결론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대학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대학조직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의 제도적 압력 하에 적극적, 소극적 순응, 그리고 무시의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각 대학조직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적 양과 교육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의존이론의 핵심논리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첫째, 절대적 자원의 양이 적을수록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적극적 순응 전략을 취하는 반면,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소극적 순응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의 양이 방대한 조직(luxurious organizations)은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따르지 않고 무시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규모가 방대한 조직은 정부로부터 자원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부재정의존도는 대학조직의 대응전략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은 전체 예산에서 정부로부

터 받은 금액의 비중이 클수록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적게 받은 대학일수록 그들의 평가지표에 따르려는 노력을 소극적이나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대학조직과의 자원의 흐름과 양이 이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부재정의존도가 대학의 대응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의 양이 적은 조직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 적은 대학조직은 정부재정의존도가 낮을수록 교육부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반면, 자원의 양이 많은 대학조직은 현재시점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한 정도가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정부재정의존도는 예산의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더욱 크게 체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취지인 입학자원 급감에 대한 대비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효과는 대학의 대응 측면에서 예산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특히 인원충원과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5년도에 1주기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2주기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1주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2014년과 2015년의 2개년의 자료만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 2주기의 평가내용과 이후 대학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의 제도적 압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원의존이론의 핵심논리를 적용하여 검증하고 함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곽주영·이윤진·민현주. (2011). 한국 상장기업에 있어서 외국인 이사 선임의 요인 분석: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국제통상연구」16(3): 79-107.

교육부. (2014a)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_____. (2014b)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_____.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교육부.

박상희·김병섭. (2012).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21(1): 39-72.

서정욱·김보경. (2015).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자원의존성을 중심으로.「행정논총」53(4): 271-298.

손현경.(2017). 대학, 기업, 지자체 간 열린 소통... 미래지향적 융합 인재 양성.「조선일보」2017.3.7

정규진·서인석·장희선. (201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22(1): 171-202.

하지수. (2017a). 1학과 1기업 1특허 추진... 창의 인재 양성에 온 힘.「조선일보」2017.4.27

_____. (2017b). 글로벌 산업체와 적극 협약... 해외취업 1위. 「조선일보」2017.4.27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편람.
Barney, Jay.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Blumentritt, Timothy P., & Douglas Nigh. (2002). The Integration of Subsidiary Political Activitie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1): 57-77.
Harrison, J. Richard, David L. Torres, & Sal Kukalis. (1988). The Changing of the Guard: Turnover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Top-Management Posi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3(2): 211-32.
Hillman, Amy J., Michael C. Withers, and Brian J. Collins. (2009). Resource Dependence Theory: A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5)6: 1404-1427.
Lester, Richard H., Amy Hillman, & Albert A. Cannella. (2008).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s Outside Director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1(5): 999-1013.
Malatesta, Deanna, & Craig R. Smith. (2014). Lessons from Resource Dependence Theory for Contemporary Public and Nonprofit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4(1): 14-25.
Mullery, Colleen B., Steven N. Brenner, & Nancy A. Perrin. (1995). A structural analysis of corporate political activity: An application of MDS to the study of intercorporate relations. Business & Society, 34(2): 147-170.
Ouchi, William G. (1980).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06): 346-358.
Oliver, Christine. (1991).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1): 145-179.
Pfeffer, Jeffrey, & Anthony Leong. (1977). Resource Allocations in United Funds: Examination of Power and Dependence. Social Forces 55(3): 775-90.
Pfeffer, Jeffrey, & Gerald R. 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 Row.
Williamson, Oliver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Vol. 866. Free Press New York.

최정인(崔正仁):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정부성과, 정책분석 등이다(choejungin@naver.com).

문명재(文命在):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 전자정부, 행정수단, 조직론, 리더십 등이다(mjmoon@yonsei.ac.kr).

〈논문접수일: 2017. 7. 17 / 심사개시일: 2017. 7. 21 / 심사완료일: 2017. 7. 28〉

Abstract

University Responses to the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Choe, Jungin

Moon, M. Jae

This study examines how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undertake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Resource Dependence Theory is used to test the absolute amount of university resources and dependence on governments' resources. The authors conducted ordinal logit regression analysi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using data from 154 metropolitan and loc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uggest that organizations with fewer resources are more likely to take active adaptation in response to request from the government policy. Moreover, the greater dependence on government fiscal resources, the more active strategies universities take. This finding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the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Key Words: Universities Reorganization Evaluation Policy, Resource Dependency Theory, Organizational Theory, Local Universities, University Budget